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법원 출입기자
 발 신 참여연대(담당: 시민감시국장 김형완 : 723-5302)
 제 목 재벌총수의 재산은닉 및 해외재산도피에 대한 처벌 촉구 성명
 날 짜 1998. 6. 20. (총 1 쪽)

성명서

추상과 같은 법의 권위로, 법대로 지은 죄를 처벌하라

재벌총수 수천억원대의 재산은닉·해외 재산도피, 엄중처벌 마땅

재벌총수들의 은닉 재산총액이 수천억원대에 달하고 일부 재벌총수들은 이 가운데 상당부분을 미국·일본·유럽 등 선진국의 금융기관과 현지법인을 통해 해외로 빼돌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이를 위해 무역거래시 가격을 조작하거나 역외펀드를 동원 해외자금을 현지에서 적립하는 등 온갖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경제가 총체적인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일부재벌의 행태는 국민들로부터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지탄을 사기에 충분하다. 특히 최근 본격적인 기업 구조조정에 착수하면서 추가적으로 곧 수만에 달하는 실업자가 양산될 전망이고, 당장 내일의 생존이 위협 당하는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들의 행태는 더욱 용서받지 못할 범죄행각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더욱 문제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정작 이같은 범죄행각에 대해 마땅히 엄중처벌을 불사해야 할 청와대 고위당국자와 검찰당국이 이들의 비위행각에 대해 “자신신고하고 재산을 국내로 재반입하면 처벌을 완화하겠다”는 식의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검찰이 “재벌그룹 총수들이 해외로 빼돌린 재산의 규모와 내역에 대해 이미 조사를 완료했다”고 하면서도 “검찰은 현재 이들 재벌총수들의 자세를 지켜보고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명백한 범죄행위에 사법처벌 외에 다른 무엇이 있는가? 그런데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며 “처벌을 완화하겠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

국민경제의 총체적인 위기국면 속에서도 수천억원대의 개인축재를 일삼고, 그것도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재벌들의 행태는 명백히 반사회적 범죄행위에 다름 아니다. 여기에는 어떤 관용도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다시 한번 사법당국에 요구한다. “추상과 같은 법의 권위로, 법대로 지은 죄를 처벌하라!”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종배 · 김창국 · 박상증